

시론



남성욱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통일외교학부 교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핵 무력 법제화’와 김정은의 입체 도발 저의는?

– ‘북핵과의 동거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에 핵폭격을 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김일성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하면서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다. 1956년 물리학자 30여 명을 소련의 드부나 핵 연구소에 파견한 게 북핵 개발의 효시가 됐다. 1959년 9월 조·소(朝蘇)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핵 개발 정책을 공식 출범했다.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과대학에 핵 연구부문을 창설했다. 1965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 도입, 본격적인 핵 연구를 시작했다. 김일성은 1965년 평양을 방문한 조총련 대표단 접견에서 10년 안에 핵을 보유하겠다는 염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한 지 44년 만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을 감행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substantial nuclear country)’으로 평가된다. 미사일 발사는 정리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수다. 김일성·김정일 집권 기간에 31회,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159회, 2022년 한 해에만 11월 5일 현재 30여 차례에 걸쳐 200발 이상을 발사했다.

3대에 걸친 핵 개발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디자인하고 체계를 구축했다. 아버지 김정일 시기 2006,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으로 기반을 닦았다. 3대 세습지도자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등 4차례 핵실험으로 완성단계를 거쳐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주의 정권 70년에 걸친 핵 개발로 북한은 지구상의 9번째 핵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습전핵(核)이라는 키워드는 북한 대내외 정책에서 대대로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핵 개발은 기술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정책적 진화를 계속했다. 당초 북한은 ‘방어용’이라는 명분을 천명했다. 2005년 2월 외무성 담화에서 ‘핵 보유’를 선언한 데 이어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직후 ‘억제·방어용’으로만 핵을 보유한다는 로키(low-key) 전략을 구사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핵 무력을 법제화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2012년 개정헌법 전문에 ‘우리 조국은 불패의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데 이어 2013년에 제정한 ‘자위적 핵 보유법’에는 대남 및 대미 핵 억제 전략을 표명했다. 이때까지도 ‘방어용’이란 명분은 유지했다. 이미 5차례 실험을 진행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했다.

북한의 핵전략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양적 변화의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질

적인 정책 변화의 핵심은 ‘핵 선제사용’이다. 2022년 4월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군복 차림으로 선제 핵 공격 가능이라는 북한판 ‘핵 독트린’을 선언했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정책이 법제화로 완성되는 체계는 북한의 독특한 통치방식이다. 핵심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5대 상황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는 핵무력 법제화는 북핵 보유가 정책적·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표현대로 100년의 제재에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일까? 야금야금 목표에 도달한 핵 무력 법제화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한 전략의 저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략이다. 평양은 핵 무력 법제화로 향후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는 국내법상 불가하다는 명분을 쌓았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춤에 따라 비핵화 문턱은 비례해서 높아졌다. 중·러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으로 형성된 ‘블록 안보체제(Bloc security)’에서 기존 북핵 협상 구도는 성과를 거두기가 용이하지 않다.

둘째,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소련의 권유로 198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고 가입했으나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경수로를 받기로 한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1994년)로 재가입하는 등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가 2003년 최종 탈퇴

를 선언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은 NPT 규정상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가입하면 영원한 가입국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가 가능한 이유다. 북한은 핵 무력 법령으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중·러의 묵인하에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셋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전략이다.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사실상 선제 사용(first use)할 수 있는 고무릎 기준이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한·미의 확장억제전략이 가동되면 핵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핵무기가 억제 수단에서 공격 수단으로 전환한 냉엄한 현실을 체감하는 양상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전략인 ‘광인 이론(madman theory strategy)’을 구사할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최강의 핵강국 중 하나,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경험한 적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푸틴의 위협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인 각종 미사일이 조선중앙TV에서 자주 등장할 것이다.

눈부시게 진화하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역설적으로 무대응 전략이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16년 동안 6차례 핵실험이 이뤄졌으나 실험 후 석달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망각 증상이 고착화했다. 보수 정부는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전략, 진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의를 신뢰하면서 북핵은 전쟁의 대상으로 전략했을 뿐이다.

1975년 NPT에 가입한 한국이 북한처럼 핵 개발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만, 빨간불 켜진 NPT 국제 핵 공조에만 안보를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추가로 7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한·미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6년간의 핵실험 역사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제재를 피하면서 시간도 벌 수 있는 북한의 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안보(安保)는 평시에는 안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나토(NATO)식 핵공유(nuclear sharing)를 검토하는 것은 남북 공멸의 길이라고 결사반대다. 귀납적으로 북한만 핵을 가져야 하고 남한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자강불식 계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환점이 돼야 한다. 핵 무력 법제화에도 무덤덤한 한국이 북핵 위협의 최우선 목표물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도발에도 금도(禁道)가 있다. 아무리 총질을 해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도 때가 있다. 하지만 11월 2일 북한의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두 가지 측면이다. 우선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당의 논평대로 북한은 구제 불능이다.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겨있는 있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했다. 그것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처음으로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은 기존 도발 패턴에서 탈피하여 닥치고 공격 수준이다. 북한의 NLL 이남 미사일 도발은 접경지역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쏜 것이 오발이 아니다. 울산 앞바다 방향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도발은 완전한 9·19 합의 위반이자 이전 도발과 차원이 다른 고강도 도발로 준(準)전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군사합의에 묶여 있는 훈련지침과 야전교범(FM)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심야에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합참은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북방한계선)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밝혔다. '해상 완충구역'은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약속한 장소다. 결국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던 2017년으로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11월 3일 1·2단 분리 실패하여 정상비행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하했지만 북한은 여하튼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에서는 즉시 호외(號外)를 발행하며 대피경보까지 올렸다. 이미 사문화되어버린 군사합의를 허울좋은 명분 때문에 붙들고 있기보다는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비무장지대 군비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핵무기로 인해 비교 불가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다 최대 60개인 핵무기를 더하면 모든 비교는 무의미해진다.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은 이미 76년 전 일본 열도에서 증명됐다. 그나마 남북한 군사 균형의 린치핀(linchpin) 역할을 하는 주한 미군은 결코 한반도 불박이 군대가 아니다.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의지가 약해지면 동맹은 언제든 떠나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입체적 도발의 외환(外患) 상황에도 국내 정치는 친일 국방 논란으로 내우(內憂)에 빠져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선 과정에서 언급된 선제타격론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북핵 개발의 역사를 간과한 오판이다. 러시아 침공 전 친러와 반러로 갈려 이진투구 양상을 보였던 우크라이나 국회를 연상시킨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다가 가슴에 안고 사는 '북핵과의 동거(with the nuclear)' 시대에는 발상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양점과 지향점을 구분해서 성역 없는 담론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핵 위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평양에서 7차 핵 실험 소식이 들려오면 북핵을 억제·상쇄하기 위한 우리의 핵균형(nuclear parity) 수립이라는 제3의 전략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